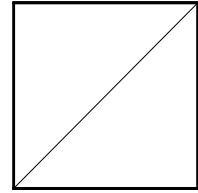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9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1. 15. (제 1 차)

의
결
사
항

디지털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 15.

1. 의결주문

디지비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디지비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사실이 적발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디지비 자산운용(주)에 과태료 40백만원 부과조치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2019.10.31.) 심의필
-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2020.1.8.) 심의필

<별지>

디지비자산운용(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디지비자산운용(주) :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 제449조(과태료)제1항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항제1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

2. 조치사유

가.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MMF”라 함)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디지비자산운용(주)은 ××××.×.×.~××××.××.××. 기간 중 ‘○○○MMF ×호’ 등 ×개 MMF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사건 발생시 원리금이 축소되도록 설계된 신용디폴트스왑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연계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 7. (생략)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략)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8. (생략)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③ (생략)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집합투자계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 9. (생략)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 · 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6.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전자단기사채등

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 4. (생략)
5.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남은 만기의 가중 평균 계산방법, 그 밖에 자산운용의 안정성 유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할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금융투자업규정 】

제7-16조(운용대상자산의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2. 제1호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것

② ~ ④ (생략)

【 DGB똑똑개인MMF1호 등 2개 MMF 신탁계약서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7.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가.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나. 위의 가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8. ~ 9. (생략)

② ~ ③ (생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디지비자산운용(주)

2. 제재조치일 : 2020. 1. 1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임원 (1명)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MMF”라 함)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디지비자산운용(주)은 ××××.×.×.~××××.××.××. 기간 중 ‘○○○MMF ×호’ 등 ×개 MMF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사건 발생시 원리금이 축소되도록 설계된 신용디폴트스왑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연계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63	02-3145-7699